

원주 요진건설산업 13년째 시공능력 1위

7,076억여원 달해 '전국 38위'
도내 유일 100위권 진입 눈길
건설협 도회 종합건설사 평가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토목건축 분야 시공능력평가에서 13년째 도내 1위에 올랐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지난 한 해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한 시

공능력평가액을 지난 31일 공시했다. 도내에서는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토목건축 분야에서 시공능력평가액 7,076억500만원으로 1위를 지켰다. 전국 38위로 100위 내 도내 업체는 요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고성 현대아산이 1,839억6,300만원으로 2위, 강릉 신화건설은 1,192억7,300만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정선 대림종합건설(981억8,500만원), 춘천 대건(947억3,9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하위윤기자

◇도내 종합건설업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순위 (단위:백만원)

순위	업체명	시공능력평가액
1위	요진건설산업(주)	707,605
2위	현대아산(주)	183,963
3위	신화건설(주)	119,273
4위	대림종합건설(주)	98,185
5위	(주)대건	94,739

<자료:대한건설협회 도회>



오인철도
건설협회
장은 1일
오전 9시

지역 회원사들을방문,
공사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요진건설 토건·조경·산업설비 실적 1위

<원주>

도건설협 올 시공평가 공시

원주 요진건설이 올 시공능력 평가에서 3
관왕을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가 발
표한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토목건축(7076억원), 조경
(1175억원), 산업환경설비 분야(1096억
원)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토목건축 분야 2위는 고성 현대아산
(1839억원), 3위 강릉 신화건설(1192억

원) 순이며 토목 분야 1위는 강릉 아라온건
설(315억원), 2위 춘천 토진종합건설
(242억원), 3위 원주 신진종합건설(187억
원)이 차지했다. 건축분야에서는 1위 토
진종합건설(237억원), 2위 아라온건설
(214억원), 3위 신진종합건설(204억원)
순이다. 조경 분야 2위는 현대아산(687억
원), 3위 영월 효성(626억원) 순이며 산업
환경설비 2위는 현대아산(919억원), 3위
대건(680억원)이 차지했다.

안은복 rio@kado.net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 효과 '4000억'

남원주 미소지움 등 10곳 배정

라운프라이빗 등 2곳 추가 참여

원주시가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를
통해 거두고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를 시행 중이다.

동참에 나선 건축공사 현장은 혁신도
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단계지구 벨
라시티, 혁신도시 모아엘가, 봉화산2지
구 푸르지오, 단구동 한신희플러스, 룯

데캐슬더퍼스트 1·2차, 호반 베르디움,
남원주 코아루 미소지움, 일산동 두진하
트리움시티 등 10곳으로 이들 모두 총 공
사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정했
다. 이들 공사현장에서 올 상반기까지
지역업체에 배정된 공사물량은 모두
3500억원대에 달한다.

올 하반기도 이같은 지역업체 배분 열
기가 지속된다. 오는 9일 단계동 봉화산
벨라시티 2차 아파트와 기업도시 7블럭
라운프라이빗 아파트가 원주시와 건축
공사 지역업체 참여제 양해각서를 체결
한다. SG건설이 건립하는 봉화산 벨라
시티 2차는 지상 19-29층 총 839세대로

총 공사비 890억원의 30.84%인 274억
원, 라온종합건설이 건립하는 라온프라이
빗은 지상 13-30층 총 713세대로 총 공
사비 928억원의 36.95%인 343억원을 지
역업체 참여 비율로 정했다. 이들 두곳
현장의 참여로 원주시 건축공사 지역업
체 참여제를 통해 지역에 배분되는 공사
물량이 41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동주택
은 물론 10층이상 건축물 공사 현장도 지
역업체 참여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업 주
체와 지역 업체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
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낙찰률 95% 넘으면 '색안경'

발주기관이 정한 사업비의 틀에 갇힌 입찰제도와 '높은 낙찰률=담합'이란 색안경을 낀 사정 당국이 국내 건설시장의 기술경쟁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해외 건설시장을 겨냥해 가격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려면 근본적으로 투찰 상한선을 허물고 가격 위주의 사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면

31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국내 첫 소형 공항인 울릉공항의 2020년 개항이 어려워졌다. 추정 공사비 5000여억원인 울릉공항 건설공사(1·2공구)가 2차례 연속 유찰됐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부산항공청이 제시한 공사비가 600억~800억원 가량 부족하다며 입찰 참가를 포기했다.

결국 건설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추정가격의 110%대로 투찰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은 기술경쟁 방식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조차 추정가격 미만으로 투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92%를 밑도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ADB(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입찰에선 예정-추정가격 이하로 투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추

발주처는 '쥐어짜기' 여전
사정당국은 '담합' 선입견

투찰률 100% 상한선 규정
해외선 거의 찾기 힘들어
"입찰 선진화 공염불" 지적

정가격을 약간 넘더라도 기술이 좋으면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가격협상 후 계약한다"고 말했다.

유찰로 시간을 허비한 울릉공항 사업은 앞으로 1년여간의 기본설계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분이 많아지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급한 사업이어서 턴키로 추진했는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며 안타까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찰률 100% 상한선이 만든 불행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 당국도 가격 위주로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공정위는 한전KDN 본사 사옥 건립사업 등 2012년 이후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을 대상으로 10여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발주기

관의 조사 의뢰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다. 특히 낙찰률 95% 이상 사업에 대해선 일단 조사 대상에 올려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률이 높으면 공정위가 고가격 담합투찰로 의심한다"며 "행여 의심을 살까 봐 맘대로 투찰하기도 겁이난다"고 전했다.

추정가격을 넘지 못하는 입찰 규정과 가격 위주의 사정 관행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 5월 공동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기술형 입찰의 발주 감소와 잇단 유찰사태에 따른 대응책이다. 가격 대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발주기관이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설계점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해 품질 경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 부처가 밝힌 제도 개선의 목적은 '재정 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기술형 입찰을 유도해도 발주기관과 사정 당국이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상반기 건설수주 61.1兆... '상고하저' 반복될 듯

작년보다 0.9% 증가 '양호'
건축·민간 '↑' 토목·공공 '↓'

올 상반기 건설수주가 60조원을 돌파하며 순조로운 행보를 보였다. 토목과 공공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민간 부문이 호조를 나타낸 결과다. 다만 올해

건설수주는 '상고하저' 패턴이 불가피한 만큼 하반기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까지 건설수주(경상)는 61조1601억원으로 전년 동기(60조270억원) 대비 0.9%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발주자

별로는 민간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건축부문 수주는 48조323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8941억원) 대비 5.3% 늘었고, 민간부문 수주도 46조3564억원으로 전년 동기(46조1605억원)보다 0.4% 증가했다.

박경남기자 knp@ ▶3면에 계속

기술경쟁 하라면서 낙찰률 높으면 담합의심 '이중잣대'

유찰의 늪 빠진 기술형입찰 시장...갈길 먼 정상화

공사비 부족·수익성 악화로 '2건 중 1건' 유찰됐지만 발주처들은 여전히 가격경쟁 위주의 프레임에 갇혀

유찰로 점철되는 기술형입찰 시장의 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정부 당국이 기술형입찰 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대책 발표 이전까지 집행된 주요 기술형입찰 공사는 약 25건, 이 중 단번에 경쟁입찰 요건을 갖춘 공사는 10건 남짓 뿐이다. 2차, 3차 공고 끝에 어렵사리 입찰 일정에 돌입한 공사를 포함하더라도 신규 발주물량의 절반은 유찰을 피하지 못했다.

대책이 발표된 후인 6월 이후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공사를 봐도,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올림(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소공사를 비롯해 인천 검단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올림공항 12공구, 시흥장현 수질복원센터, 울산신항 남항 방파제안 축조공사 등이 줄줄이 유찰상태를 겪었다.

경쟁은 고사하고 단 1명의 입찰참가자도 맞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서너차례의 유찰을 거듭하다 수의계약이나 기타공사로 전환된 공事も 부지기수다.

유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목할 수 있지만 핵심은 역시 수익성이다. 정부가 제도 취지에 걸맞은 기술 경쟁을 앞세워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적정 공사비, 즉 수익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억원의 설계용역비까지 들었음에도, 도저히 시공적자 우려를 떨쳐낼 방도가 없어 입찰제안을 포기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낙찰률에 대한 발주기관 및 사정기관의 인식은 여주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확정가격 최소화 및 설계점수 강제차등 확대, 가격비중 축소 등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을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낙찰률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업계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형국이라고밖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30여건의 기술형입찰을 분석해보면, 평균 낙찰률은 공사예산 대비 96~97%에 이른다. 95% 미만 낙찰률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안된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 공사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실행된 바가 없어 100% 낙찰률로 수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준공 후 정산 시 적자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수익성 우려로 수백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들이 2건 중 1건꼴로 유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낙찰률 상승은 필수불가결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의심받으며 위축될 사이인 아니라 오히려 확정가격이나 강제차등 확대 등 답판으로 기술을 뒤집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제대로 부합해 가는 것 여단 분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가격비중을 최소화하고 최대 10%까지 설계(기술)점수를 벌리는 강제차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낙찰률이 너무 높아 의심스럽다는 인식을 갖는다는 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 경쟁이 만연했던 시절에나 통용됐던 낙찰률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버리지 않으면 기술형입찰 시장의 정상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또한 갈수록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봉승권 기자 skbong@**

낙찰률에만 의존하는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

박한 공사비, 실행률 악화 심각한데... '숫자'만으로 막무가내식 담합 조사

지난 201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달 시스템을 운영 중인 발주기관 30곳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발주기관이 입찰담합을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 모인 발주기관들은 앞서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속속 운영에 들어갔다.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의 큰 틀은 정량평가지표를 분석해 담합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한 후 정성평가를 더해 공정위 조사요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량평가에 정성평가가 추가 반영되긴 하지만 담합 의심업체를 우선적으로 가려내는 정량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량평가 지표는 낙찰률, 참여업체 수, 계약 방식, 유찰 및 예정가격 인상률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정량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량평가 지표 가운데 낙찰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와 발주기관의 입찰담합 의심은 입찰 참여업체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률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만큼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낙찰률이 높을수록 담합 의심업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 구축 전에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대인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95% 이상이 면 발주기관이 공정위에 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한 것만 보더라도 담합 의심업체를 추출하는 데 낙찰률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 짐작케 한다.

사실상 낙찰률이 담합 의심업체를 가려내는 최우선 잣대가 된 가운데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에는 정작 높은 낙찰률에

탄핵권이 형성되는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기령 최근 집행된 기술형 입찰의 낙찰률이 모두 95%를 넘을 경우 박한 공사비에 따른 실행률 악화 등 낙찰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막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95% 이상의 낙찰률을 기록한 입찰 전부를 담합으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감시 당국인 공정위는 발주기관의 조사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입찰 참여업체들은 실행에 맞춰 높게 투찰했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 의심업체를 추출하기 위한 정량평가 지표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낙찰률"이라며 "총사업비와 실행률 등 낙찰률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낙찰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막무가내로 담합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예정가격 없는 선진국 입찰시스템-싱가포르 지식산업센터

1순위 업체 투찰률 '100%'... 140%도 나와

가격경쟁보다 품질 확보 우선

최근 집행된 1158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 입찰. 마스터 컨트랙트 서비스(Master Contract Services)라는 싱가포르 건설사가 1순위를 차지했다. 새삼 놀라운 것은 마스터 컨트랙트 서비스의 투찰률이 100.0%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2순위와 3순위에 오른 리안 벤(Lian Beng)과 소일 빌드(Soil Build)가 각각 106.8%, 4순위인 프리사이스 디벨롭먼트(Precise Development)가 111.7%, 5순위인 김리(Kimly)가 118.0%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어 6순위 키엔타(Kienta)의 투찰률은 119.2%, 7순위 HPC빌더스(Builders)는 119.7%, 8순위 웰리테크(Welitech)는 120.7%, 9순위 익스팬드(Expand)와 10순위 SCB는 각각 122.3%, 123.0%에 투찰했다. 심지어 23순위인 아우 리(Yau Lee)는 투찰률이 무려 141.8%에 달했다.

우리나라 공공건설 시장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투찰률로 당연히 입찰이 무효 처리되고 서둘러 재공고 절차에 들어갔을 게 불보듯 뻔하다.

100%를 웃도는 투찰률에도 싱가포르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 입찰에 별다른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낙찰자를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

라 입찰제도와는 그 출발부터가 달라서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의 입찰에선 예정가격이 없다. 설사 예정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예정가격을 초과 투찰해도 입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산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입찰 참여업체의 투찰가격 자체를 존중하는 제도와 정책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격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투찰가격을 통한 품질 확보와 안전 시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입찰 참여업체들의 투찰 범위도 넓다. 일정한 선에 투찰률이 몰려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입찰 참여업체 간 투찰률이 5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정가격과 예산액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만큼 건전한 기술경쟁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찰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술형 입찰 이외에 종합심사 낙찰제, 적격심사 등 기타공사로 분류되는 입찰에서도 선진국들은 대안을 허용한다.

싱가포르 지식산업센터 입찰에서도 상위 10곳 중 4곳이 대안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차별화된 설계·가격 전략을 통한 맞춤형 대안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박경남 기자**

아하! 그렇구나

면허 없는 수급인과 도급인의 계약 체결

Q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인 A가 도급인 B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합의 아래 계약상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C로 표시하였으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가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는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

A

본 사안은 A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사업장의 공사대금을 유용하면서 공사가 타절되었고, A의 채권자들이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추심청구를 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사자 결정의 방법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의 형식에만 치중하여 A가 C

의 명의를 빌려 B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수행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실상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수급인에 해당된다는 의미일 뿐 그로 인하여 A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A가 아닌 B라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계약서가 C명의로 작성된 것은 A와 B 사이에 이미 C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양해한 결과이므로 그 과정에서 공사계약서를 C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A가 아닌 C로 단정하여 A의 잔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참조).

위 판례는 기존의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가 건설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여 준 것으로, 명의대여 공사 후 발생한 법적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명의를 대여한 C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